



자유한국당
국회의원 김선동

보도자료

배포일시	2018. 10. 10(수)	담당자	정한빈 비서 (010-7204-6361)
문 의	784-8971~3		박필동 보좌관

청와대가 주도한 부처별 적폐청산 TF, 무늬만 적폐청산TF! 실상은 조직개편·제도개선용 TF!

- 청와대가 지정한 19개 부처 중 13개 부처(68.4%)가 조직개편, 제도개선용
- 국가보훈처, 행정안전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폐청산TF 구성조차 안 해
-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, ‘적폐청산 = 정치보복’ 자인하는 꼴

-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‘적폐청산’을 담당하는 19개 부처 TF 중 13개 부처가 적폐청산과 거리가 먼 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.
- 청와대는 지난해 7월 ‘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’을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F 구성을 지시했으나, 해당 부처의 68.4%(13개 부처)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‘무늬만 적폐청산 TF’를 구성, 운영하였다.
- 특히 국가보훈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혀다.
-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부처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‘정치보복, 보여주기식 행정’에 매달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.
-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(서울 도봉구을, 정무위)은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 대상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처의 ‘적폐청산 TF 구성 및 운영 성과’를 전수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.

-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적폐청산 목적에 맞는 TF부처는 교육부, 국방부, 문체부 등 3개 부처(15.8%)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, 군 정치개입 의혹,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청와대가 주장한 국정농단 관련한 TF로 볼 수 있다.
- 과기정통부, 국가보훈처,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(15.8%)는 제출자료를 통해 부처 스스로 “적폐 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다”고 밝혔고, 어떤 부처는 “적폐 청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성하지 않았다”라고 강조했다.
- 기재부, 외교부 등 13개 부처(68.4%)의 적폐청산 TF의 내용을 살펴보니, 대부분 조직개편과 제도 개선이었다.

<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 TF 전수 조사 결과>

부처수	구성			미구성
	소계	적폐청산용	단순 조직개편·제도개선용	
19개 부처	16개 부처	3개 부처(15.8%) (교육부, 국방부, 문체부)	13개 부처(68.4%) (기재부, 외교부, 통일부, 산업부 등)	3개 부처(15.8%) (과기정통부, 국가보훈처, 행정안전부, 권익위)

▲ 19개 부처 제출자료, 김선동 의원실 분석

-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‘국정과제추진 TF’로 명명하여 구성, 운영했다고 밝혔다. 국정과제추진 TF의 주요 내용은 기재부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·개선으로, ▲면세점 제도개선, ▲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청와대가 주장하는 국정농단과 상관이 없는 주제들이다.
- 외교부는 ‘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,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’를 구현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「외교부 혁신 TF」를 출범했다고 밝히면서, ▲인사, ▲조직 및 예산, ▲업무방식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 38개 혁신과제를 담은 ‘외교부 혁신로드맵’을 발표했다.
- 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을 TF팀장으로 하고 6개 분야별 주무과장을 팀원으로 하여 부패방지 및 조직문화개선을 포괄하는 조직문화개선 TFT를 구성하였다. 6개

분야는 R&D분야, 산업분야, 에너지분야, 통상분야, 무역분야, 표준·인증분야로 산업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.

- 대부분의 부처는 조직개편, 제도개선을 위한 ‘부처내 TF’를 ‘적폐청산 TF’로 포장되었다.
 - 적폐청산 TF 명칭도 ‘국정과제추진TF’, ‘외교부 혁신 TF’, ‘조직문화개선 TF’, ‘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’, ‘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’ 등이다.
- 또한, 적폐청산 TF는 부처 주도가 아닌 청와대 주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.
-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‘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(수정)’ 32쪽에 따르면, TFT 구성 대상 부처는 19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지정했다고 적시되어있다.

<국민권익위,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(수정) 32쪽>

○ 부처별 부패취약분야 대책 마련

- 부패공직자 징계,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·사면, 부패수익 환수 등 적발·처벌과 관련된 법·제도 정비
 -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제도와 문화 등 시스템 전반의 원인규명·분석 및 조사
- ※ TFT 구성 대상 부처(19개,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지정)별 국정농단 관련 개별 요소 조사를 통해 개선사례 발굴 및 백서 발간('18년)

- 김선동 의원은 “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TF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조직개편, 제도개선 등으로 변질되었다”라며, “당초 청와대의 적폐청산이 무리수였고 정치보복이었다”라고 강조했다.

< 각 부처에서 제출한 적폐청산 TF 구성현황>

연번	정부부처	TFT구성여부	세부계획
1	기획재정부	국정과제추진TF	· 면세점 제도개선,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·개선위해 6월까지 5차례 회의 개최
2	과학기술 정보통신부	×	
3	교육부	조직혁신TF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	·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 위법성, 부장행위 판별 · 관련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 검토 등 · 18.3 부당운영, 배제,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수사 의뢰 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요청
4	외교부	외교부 혁신TF	· 인사, 조직·예산, 업무방식 등 조직 내 혁신주도
5	통일부	정책점검TF 정책혁신위원회	· 정책리뷰(개성공단, 금강산관광, 사회문화교류 등) · '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' 제출
6	국방부	군 적폐청산위원회	· 군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등 10개 권고문 제출
7	행정안전부	×	
8	문화체육관광부	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	·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,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및 백서 발간
9	산업통상자원	조직문화개선TFT	· R&D, 산업, 에너지, 통상, 무역, 표준 등 분야에 대해 2차례 회의 개최
10	농림축산식품부	농정개혁위원회	· 농정·식량·축산 분과위원회와 반부패 TF 구성 · 3차례 전체회의 통한 49개 안건 논의, 지역 공청회 제안과제 196건 수렴
11	보건복지부	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	·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,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 10차례 전체회의 진행(※결과보고서)
12	환경부	환경정책제도개선 위원회	· 규제완화 개선, 차별과 배제 철폐, 4대강사업, 흑산도공항건설 등 8개 과제 선정 · 중간보고는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. 현재 최종보고서 작업 중
13	고용노동부	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	· 행정입법 실태, 소속기관 평가, 민간위탁·연구용역 사업 운용, 노동통계, 근로감독 등 과제별 권고문 제출
14	여성가족부	여성가족부 국정과제TFT	·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'화해·치유재단' 지적사항 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(※점검결과보고서)
15	국토교통부	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	· 주택, 재건축, 공공임대, 부동산가격공시, 철도,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개선권고안 제출(1,2차) · 올 하반기 중 건축안전, 건설, 물류, 항공산업 등 3차 개선권고안 제출 논의 중(잠정)
16	해양수산부	해양수산분야 3관혁신 TF	· 관행안주, 관망보신, 관관남용 탈피 및 고질적 미해결 과제 혁신방안 논의 · 18.2 해양, 수산, 해운 등 추진과제 로드맵 제출
17	국가보훈처	×	
18	금융위원회	조직혁신기획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	· 18.2 행정 투명성, 재량권 적정성, 인사 공정성 등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출 ※위원장 윤석현 現 금감원장
19	공정거래위원회	신뢰제고TF 법집행체계개선TF (기존TF로 운용)	· 9월중 조사절차규칙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· 18.2 행정, 민사, 형사분야 11개 과제에 대해 개선안 제출